

'97 통상산업부 주요 업무 계획

1. 무역수지적자의 획기적 감축

가. 대내외 수출입여건 및 전망

(1) 수출여건

세계경제 및 교역의 신장세가 전반적으로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일본, 개도국 등 우리 주력시장의 경제성장을 및 무역신장세는 현상유지 또는 둔화될 전망이다.

원화 및 엔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로 예상되나, '95년 7월이후 엔화 절하폭이 큰데 따른 우리 수출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2) 수입여건

경제성장, 설비투자둔화 및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세로 수입 수요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원유가격의 상승, 국내에너지소비 증가세 지속 등으로 에너지수입은 늘어날 소지가 있으며 고급소비재 수입은 국내소비성향

에 비추어 지속될 전망이다.

(3) 수출입 전망

최근의 국내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금년에도 작년에 버금가는 무역수지적자 예상되며, 다각적인 수출추진 및 수입안정화 등 획기적인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수출은 1,420억불, 수입은 1,560억불로 무역수지 적자는 금년보다 64억불 개선된 140억불 선으로 전망된다.

나. 무역수지 개선대책

(1) 수출환경의 개선

- 자금지원 확충
-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보완
-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 강화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신용상의 우대지원
-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주요

전시회 참가 확대

-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중점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을 해외시장개척 중심으로 전환
- 기업 및 상품이미지 제고를 통해 수출상품의 고가화 유도
-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통상지원활동 강화

(2) 수입수요의 안정화

- 수입유발요인 최소화
-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본재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
- 수입유발적 자금공급제도의 개선
- 폐자원 활용도 제고 및 음식물 낭비 축소
-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으로 수입수요 절감
- 건전한 소비분위기 확조
- 소비지출 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편
- 합리적인 소비풍토의 조성
- 수입관련제도 운영의 내실화
- 국제규범과 조화되는 수입관리 제도의 운영개선

- 관세청 등 수입유관기관간 업무협조체계 강화

(3) 무역제도의 선진화

- 수출입 관련제도의 원칙적 자유화
- 무역 하부구조의 지속적 확충
-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선진화기반 구축

(4) 획기적인 무역수지 개선대책의 추가마련

- '96년중 마련한 무역수지개선 및 경쟁력 강화시책(6차)의 추진 실적 점검
- '97년 무역수지적자를 대폭 축소시키기 위한 「무역수지개선 100대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다. 적극적인 대외 통상협력활동의 전개

(1) WTO, OECD 등을 통한 통상이익 확보노력 강화

- WTO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 OECD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가입실익을 극대화
- APEC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 ASEM 등 주요분야별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2) 주요 교역국과의 미래지향적 통상협력 추진

- 통상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산업통상」의 전개

(3) 권역별 시장특성에 맞는 차

별화된 통상 및 산업협력활동 전개

□ 성숙시장

○ 미국

- 한·미 기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협력을 정부차원에서 본격 지원
- 통상마찰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통상활동 전개

○ 일본

-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수출촉진활동을 강화
- 부품산업협력, 기술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 EU

-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산업협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 상호인정협정협상, 반덤핑규제 완화 노력 등 통상활동 강화

□ 성장시장

○ 중국

- 중국의 시장개방 및 여건변화에 부응한 시장개척 활동 강화
-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한 장기 협력기반 확대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 진출유망분야에서의 우리기업 수주 및 수출 지원
- APEC 등 지역협력체를 통한 시장진출 확대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 상무관 파견, 무역관 증설 등 통상하부구조 확충

□ 잠재시장

- 러시아, 베트남 등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

- 정부간 협상 및 대화체제 구축
- 투자 및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진출기반 확대

○ 인도, 이집트 등 서남아·중동·아프리카 국가

- EDCF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
- 경제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4) 통상활동 기반의 구축 및 통상정보화의 강화

- 상무관, KOTRA 해외조직망 등 통상인력의 보강과 이들과의 연계기능 강화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과 무역산업위원회 구성 등 통상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 통상정보화의 체계화 및 실효성 제고

2. 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강력한 추진

가. 우리 산업의 여건과 전망

(1)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

과거 세계경제의 변화가 군사력·정치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는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재편되어 정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경제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2) 우리 산업경쟁력의 구조적 강화

- 대외개방의 가속화
- 생산요소비용의 과다
- 산업기술수준의 취약 및 기술 개발투자 미흡
- 시설개체 등 합리화투자의 부족

(3) 국내 산업경제 전망

- 경기 순환기적으로 경기회복은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
- 노동계의 불안요인 상존
- 제조업계의 인력난 가중 우려
-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96년 이후 기업의 자기자본 증가세가 크게 둔화
-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채산성악화로 매우 어려움
- 따라서 '95년 하반기 이래 지속되어온 경제적 어려움이 금년에도 쉽사리 개선되기가 어려울 전망

나. 산업경쟁력 강화시책

(1) 생산요소비용의 획기적 인하

- 금융비용의 완화
- 임금안정
- 지가부담의 추가완화
- 물류비용의 절감
- 과도한 기업부담이 경감 및 규제완화

(2) 생산성 제고·품질향상·기술혁신의 과감한 추진

- 생산성제고를 위한 기업의 투자욕 고취

- 기술개발투자의 촉진
- 핵심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확산
- 산업수요에 입각한 기술인력의 공급확대
- 산업기술 인프라의 구축
- 산업디자인 개발
-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지원
- 개발된 제품의 산업화 촉진
- 인력수급의 안정
- 노사안정
- 품질경영의 확산 유도

(3)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

- 자본재산업육성시책의 지속추진
- 첨단산업육성 지원제도의 강화
-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 추진
- 업종전문화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4)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 정보통신기기
 - 2단계 대형컴퓨터 개발사업 등 핵심요소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추진
 - 이동통신단말기의 기술수준 확인증명제도 등
- 반도체
 - 비메모리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핵심기술개발 촉진
 -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인력 양성·공급확대 및 펜티엄

급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

- 메모리 부문의 비교우위 지속 유지
- 1G DRAM 양산기반기술 개발 및 64M DRAM 양산체제 구축
- 반도체 핵심장비·재료의 국산화 촉진 등 기반기술 개발강화
- 영상기기
 - HDTV 기반기술개발을 촉진
 - GA 규격(미국)과 KS규격을 만족시키는 공통기반기술 개발
 - 차세대 디지털 VCR·캠코더 등 첨단영상기기 기술개발 추진
- 가전
 - 전통가전의 고부가가치화 및 멀티미디어형 신제품 개발추진
 - 공급 및 수요업체간 협의를 통한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지속추진(5개제품 19개 부품)
 - 폐가전제품의 종합처리시설 건립 등 재활용체제 구축
- 충전기기
 - 초고압기기의 핵심기술개발('97 : 260억원)
 - 조명연구소·초소형정밀기계·초전도응용기술공동연구기반구축('97 : 205억원)

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1)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및 창업 활성화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확대 실시

-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법제정 추진
-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2)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 기업간 기술협력 및 기술교류 확대
- 애로기술의 발굴 및 기술지도 강화
- 「100PPM품질혁신사업」의 지속적인 확산

(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반 조성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유통산업 발전기반 구축
-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 도·소매기능의 강화로 유통효율 제고
- 신유통방식에 대한 개선대책마련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마. 지방산업의 균형적 발전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확대로 일괄서비스 제공

-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임대공단 조성 확대

- 소규모공장에 대한 부담금 감면

-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천안, 광주) 입주촉진대책 추진

- 지방첨단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강화

- 민간 산업단지조성 활성화

3. 에너지 소비의 과감한 절약과 수요안정

가. 에너지 소비 및 수출입

(1) 에너지 소비현황 및 전망

우리의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93년 이후 연간 9% 내외의 증가세 지속하고 있으며, '96년 에너지소비는 '95년보다 다소 높은 9.8% 증가로, '97년 에너지소비는 '96년보다 낮은 8.0% 증가가 전망된다.

(2) 에너지 수출입 전망

'94년 이후 원유도입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은 수입물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 예상되며 에너지 수출도 큰 폭 증가가 전망('96 : 38억불→'97 : 55억불) 된다.

나.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1) 절약기반 조성시책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금융지원 확대 및 세제혜택 지속
-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촉진
- 에너지가격의 단계적 상향조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지원
-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의 전개

(2) 수요부문별 시책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2단계 절약사업 추진
- 노후 보일러 및 요·로 교체 추진
-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 에너지 다소비건물 집중관리
- 주택 평균 에너지사용량 고지 및 절약운동 전개
- 조명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에너지 효율등급표시제도의 보완
- 경자동차(800cc미만) 보급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